

#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취임 후 한일관계 전망

발표자. 박승민 일본 文藝春秋(문예춘추) 서울특파원

## 1. 한일관계의 현 상황 (현주소)

스가 총리 취임 후, 한일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일 양국의 현 상황부터 간단히 짚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최근의 한일관계는 주지의 사실대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2018년 10월에 우리 대법원이 내린, 일제시대, 징용노동자 관련 일본 기업에 대해, 위자료 1억원씩 지불하라는 배상 판결을 빌미로, 일본정부가 크게 반발하면서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물리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작년 7월, 일본이 반도체 첨단소재 등 3가지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는 무역 보복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에 맞서 한국은 일본과 맺은 "군사정보교류협정"(GSOMIA) 파기로 대응하려 했지만, 미국이 대중(對中) 한미일 3각 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해, 언제라도 지소미아를 파기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한일간의 GSOMIA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일관계를 현재와 같이 경색되게 만든 사건들을, 시간의 역순으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에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의 외무장관이 서울에서 "한일 위안부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이 합의에 의해 설립된 게 "화해치유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 11월에 이 "화해치유재단"을 해체시켰습니다. 이때도 일본은 국가 간의 합의를 깼다며 심하게 반발했습니다.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2년 8월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현직 국가원수로서는 최초의 독도 방문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고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일본의 진보성향의 언론으로 한국에 대해서도 비교적 우호적인 논조의 ‘아사히신문’은 “분별없는 전대미문의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경향신문은 당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가리켜, “친·인척, 측근 비리 등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한일 갈등을 활용하려는 정치적 노림수도 읽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오후 독도를 전격 방문했다. 이 대통령이 1954년 독도의용수비대가 바위에 새겨놓은 '한국령' 글씨를 손으로 만져보고 있다. 독도=최승식 기자

(사진, 중앙일보 제공)

이명박 대통령은 이어, 독도 방문 뒤 같은 해 8월, "(일왕이 방한하려면)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며 '톤'을 높였습니다.

당시 야당,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민주당)은, "실효적 지배 중인 독도를 방문해,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의도에 판을 열어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2012년 8월 21일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독도방문 이후 한일간의 '통화스와프'를 중단시켰습니다. 이런 조치는, 2001년 '통화스와프'체결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일본이 경제를 외교갈등의 보복으로 삼은 첫 사례였습니다.

## 2.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진 원인

### 1) 가해자인 일본정부가 가장 큰 책임

첫째는, 지금의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진행된 가장 큰 책임은 물론 가해자인 일본정부에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강제적인 한일합방에 의한 식민지 지배를 차치하고라도, 과거 역사문제 등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의 사실(史實)을 교과서에 제대로 실지 않고 있고 거의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식민지 시대에 한반도에서 자신들에 의해 어떤 일이 자행됐는지를 직접 경험을 통해서나 선배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던, 과거 정치인들은 지금의 정치인들과 달리, 외교적 협상 등에서 한국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분위기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후 세대인 지금의 정치인들은 한국에 대한 그런 역사적 사실(史實)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음의 부채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언제까지 사죄하라는 말이나"라고 역으로 공격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들은 "사죄는 피해자인 상대방이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이 된 데는 우익 성향이 강한 아베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장기집권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우익들의 지지로 두 번이나 총리가 된 아베 씨는 우익들을 선동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역사 수정주의자이며, 철저한 국수주의자입니다. 내셔널리즘을 이용해 반한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아베 씨는 2006년부터 1년간 1차집권 기간을 제외하고도, 2012년부터 시작된 2차 집권 기간에, 자민당 총재선거 2회 연임을 3회 연임으로 바뀌가면서, 7년 8개월간 장기 집권했습니다. 이 기간의 한일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 2) 한국의 책임은 없는가

### ①우리의 대응에 문제는 없는가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한일청구권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본 측은 한국의 징용노동자 등에게 배상을 자기들이 직접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한국 측이 우리 정부가 지불하겠다고 주장해 그대로 체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박정희 정부에서는 물론 노무현정부 이전까지 한국 정부는 징용노동자 등의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받은 배상은 대부분 생산물(물자)과 용역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배상 물자를 가지고, 625전쟁의 폐허에서, 나라의 기간산업을 먼저 키우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일협정이 1965년에 체결되었는데, 한국 정부에 의해 2007년에 처음 지급된 것은, 피해자들에게는 늦은 보상이었습니다. 결국, 그동안 한국의 징용노동자 등 피해자들은 배상금을 일본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 배경과 위안부문제, 역사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반일감정’은 고조되어 갔고,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고는, 일본과의 관계가 좋았던 시절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일기본조약” 협정체결 과정과 방식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체결해 55년이나 지난 국가간의 협정에 대해서는 파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생존해 있는 할머니들의 엄중한 증언이 있기 때문에, “한일

청구권협정”의 틀을 벗어나 일본과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모집과정에 일본정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군부의 관여를 일정 부분 시인하는 “고노담화(河野談話)”(1993년)와 “무라야마담화(村山談話)(1995년)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후에 아베 씨는 2차 집권 기간에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유명무실화 하는 발언을 국회에서 자주 했습니다.

## ②우리 국가지도자들의 문제

일본의 아베 전총리는, 총리 사임 후에,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靖国神社)를 벌써 두번이나 참배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본인이 총리 재직 때 참배하지 못한 것을, 퇴임 후에 참배한 측면도 있겠지만, 우익들을 장악해가며, 일본 정계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해 가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아베 씨 같은 일본의 지도자가 자신을 지지하는 정파를 자극해 국정 지지율을 유지해가듯이,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반일감정을 자극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행태는 보수진영의 대통령이건, 진보진영의 대통령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이 그 단적인 예일 것입니다. 우리 국가지도자들이 일본의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장에서는 강하게 따지지 못하면서, 대부분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 이용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권의 구심력을 위해 반일감정을 이용하는 것은, 국가지도자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가지도자들이 일본을 향해, 이런 자극적인 발언들을 할 때마다, 요즘 자주 쓰는 표현으로 ‘사이다 발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감정론”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면에서는 우리국민들이 국가지도자가 반일감정을 부추기는데 이용당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반일감정을 이용하지 않고 극일 할 수 있는 국가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국가지도자들이 그런 발언을 한다고 해서 한일간의 역사문제나, 독도와 같은 영토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왕 사죄 발언 이후에 저는 명동에 나가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관광객들이 5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명동거리는 한산했습니다. 명동 상인들은 하소연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그 이후 지금까지도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 3. 일본의 스가 총리는 어떤 인물인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스가 총리를 파벌, 학력, 가문이 없는 3무(無) 정치인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취미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무색 무취한 인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용을 중시하는 정치인입니다.

일본의 지인 저널리스트는, "일본의 스가 정권은 현실적인 정권인 것처럼 보이지만, 도대체 어떤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지, 국가상(國家像)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총리 보좌관으로 교도통신 논설부위원장 출신인 가키자키 메이지(柿崎 明二) 씨가 임명되었습니다만, 이 사람은 좌파성향으로 이제까지 아베 전총리를 비판했던 정치부 기자 출신입니다. 일본의 한 저널리스트는, 자신을 총리로 당선 되게 해준 아베 씨를 비판해온 언론인을 보좌관으로 기용한 것에 대해, 스가 총리가 "인사(人事)하는 것을 보면 아주 무서운 사람이란 걸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아베 씨만큼 드러내 놓고, 한국을 적대시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강제징용 배상문제 등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강제징용 배상문제와 관련해, "건전한 일한(한일)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여기서 '적절한 대응'이란,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조치로 일본기업에 대한 자산 강제매각(현금화)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용 가능한 조치가 없을 경우, 스가 총리가 올 연말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불참할 것이라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 10월 12일자) 일본기업의 자산 강제매각 중단을, 한중일 정상회의의 참석조건으로 걸어온 것입니다.

스가 총리가, 동북아 3국 정상의 정례적인 회담을, 한국과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처리문제로 불참하겠다고 조건을 내세운 것은, 3국정상회담의 개최 취지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비상식적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스가 총리의 참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정권 시절에는 경제산업성의 관료들이 총리 관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수출규제 등을 들어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 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산업성의 관료들 대신 외무성 출신 관료들이 중용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에서는 총리실이 외교를 주도했다면, 스가 정권에서는 외무성이 주도할 겁니다. 스가 총리가 외교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4. 스가 총리 취임 후 한일관계 전망

스가 정권에서의 한일관계 전망에 대해 일본 기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스가 정권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제 3차 아베 정권과 같다. 한국의 현 정권과는 협상을 하거나 관계를 돈독히 할 생각은 없을 것 같다"

"스가 정권도 한국의 문 정권과는 전혀 잘 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마주하는 방식에 대해 아베 정권 때 했던 방식과 바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시다"

“스가 정권이 단명으로 끝날지, 장기 집권할지에 따라 한일 관계가 어떻게 움직일지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스가 총리로 바뀐 이후에도 대부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가 총리도 한국에 대한 탐색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1일, 스가 총리와 롯데그룹 신동빈(辛東彬) 회장이 도쿄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1시간 30분 동안 점심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스가 총리는, 신회장을 통해서 강제 징용 배상문제를 한국측이 어떻게 해결하려 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타진해보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한국 외교에서 일본의 모태기 토시미츠(茂木敏充) 외상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한국과 인연이 깊은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모태기 외상은 이전, 문예춘추 취재에, 한국에 대해 표현을 억제하면서, “외교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의 주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왼쪽)과 모태기 토시미츠(茂木敏充) 일본 외상 (외교부)



## 4. 일본과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1) 국가 간의 관계설정

한일 양국의 국가 간의 관계설정과 민간인끼리의 관계설정, 즉 투트랙(Two Track) 접근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싫든 좋든 지리적으로 숙명적인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거기에다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 국가입니다. 미국은 한미일 3국을 삼각동맹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민지 지배에서 비롯된 양국간의 괴리는 심연처럼 깊습니다. 이 괴리를 메꾸는 과정은 지난한 여정입니다. 어쩌면 이 여정은 끝이 없는 여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여정을, 어떤 여정으로 만들어 갈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과의 역사문제, 영토문제, 식민지시대 피해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주장한다 해도, 일본의 현재의 태도를 보면, 금방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해자인 일본이 겸허히 손을 내밀고 진술한 사죄와 화해를 원한다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일본을 숙적으로 생각하며, 최악의 상황을 만들며 늘 살얼음 걷는 듯한 긴장관계로 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양국의 문제가 금방 해결되기 어렵다면, 해결을 위한 외교 노력은 경주하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며 경제협력 등에서 이웃 국가로서의 메리트를 살려나가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는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일(克日) 할 때까지는 용일(用日)하는 것, 즉 일본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국가지도자(대통령)들은 어떻게 대일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봤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단순히 국민정서(반일감정)를 자극하는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 2) 양국 민간인의 관계설정

이 문제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양국 국민들은 좋은 관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전까지는 최악의 한일관계로,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연간 한일 양국인들의 상호 방문자수는, 합계 1천만명이 넘었습니다. (2018년, 한국인 일본 방문 753만, 일본인 한국 방문 294만) 물론 일본을 찾는 한국인 숫자가 2배 이상입니다만.

2012년에는 한국을 방문한 일본관광객 수가 351만명으로,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숫자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던 다음해인 2013년에는 일본인 관광객이 275만명으로 77만명이나 줄어 급감했고, 2015년에는 184만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

이런 데이터를 보면, 한일 양국의 정치가 양국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는 제2의 한류(韓流) 붐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은 K-pop에 열광합니다.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문예춘추의 기자는 이 드라마를 두번이나 봤다고 했습니다.

이런 한국 대중문화가 인기가 있으면서도, 모순된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지금 최악입니다. 정치와 문화는 별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맺음말

우리는 한국의 현실에 맞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경제를 덮고 있습니다. 국가지도자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에 매진할 때이지, 역사, 영토문제로 비생산적인 데에 에너지를 낭비할 때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완전히 따라잡은 후에 본격적으로 반일(反日)을 하고 그들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고 사죄를 받아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국민성 중에 자신보다 강한자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즉 인정하

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학기술과 경제가 일본을 앞설 때, 아베 전 총리 같은 역사 수정주의를 다시 수정해주면 될 겁니다.

아직은 더 힘을 기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을 활용(用日)해 극일 할 때까지 '반일(反日)은 접어두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